

광주 군공항이전 실타래 무안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현경면 일대 347만㎡규모…지역 전략산업 유치 추진
무안공항·호남고속철도 연계…산업·물류 거점 육성
김산 군수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기대…역량 집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현경면 일원 약 105만평(3.47㎢) 부지가 ‘무안 분산 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됐다.

국가산단은 무안군이 광주 군공항 이전의 핵심 선결 조건으로 요구해온 것인 만큼, 군 공항 이전의 돌파구 마련과 함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무안군 등

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12월 17일 광주 군 공항 이전 6차 협의회 발표에 포함된 ‘무안 국가산업단지 신축 지정’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가 사업추진 필요성, 입지 적정



성, 지역 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이번 후보지 지정으로 호남권의 신성장을 견인할 핵심 산업거점 조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무안국제공항,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기반으로 에너지

와 산업을 연계한 미래형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무안군은 국가산단에 반도체 소부장과 에너지 신산업, 정밀산업, 물류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집적해 광주 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계한 호남권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서남권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기업 수요 확보와 투자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기업 입주의향서와 업무협약(MOU)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앵커기업 유치와 실질적인 투자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도 산업단지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방정부·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무안국제공항과 철도를 잇는 교통망 구축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무안공항역을 포함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해 국가산단을 공항·철도와 연계한 산업·물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무안군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 이전, 정부와 전남광주주시의 1조 원 규모 지원, 무안국제공항 인근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등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해왔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후보지 지정은 무안군민의 염원과 정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관계기관의 협력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다”며 “무안의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서남권 미래산업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만드는 국가산단으로 반드시 성

공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28일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제2차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무안군 땅owner 일대가 이전 후보지로 의결되면,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설 전망이다.

이전 후보지 지정 후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국방부, 재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전사업지원위원회가 꾸려진다.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주민공청회와 주민투표, 무안군수의 유치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이전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는 25일 8월 정례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박병규 광산구청장, 신수정 북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임택 동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광주특별시 5개 자치구, ‘시 전환’ 공동용역 추진

22개 시·군과 재정·행정서비스 등 격차 해소
김이강 “효과·영향 등 분석 후 통합시 전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가 ‘시 전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공동 용역을 추진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는 25일 8월 정례회를 열고 공동 안전인 ‘5개 자치구 시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22개 시군과 5개 자치구 간 재정권 격차를 해소하고, 동등

한 수준의 행정·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자치구의 시 전환을 위해 마련됐다.

5개 자치구의 시 전환 요구의 배경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기초지방정부 간 자치권과 재정 여건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구청장들은 시로 전환될 경우 사무·재정에 미치는 효과 및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5개 자치구와 통합시가 함께 공동으로

용역을 맡기로 결정했다.

앞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광주 서구청)은 지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청장들의 요구를 반영해 마련한 개정 법률안은 기존 동·서·남·북·광산구를 폐지하는 대신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기와 특별시가 지원하고, 이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서구가 제안한 가로환경관리원의 위험수당(월 5만 원) 신설에 대한 안전도 논의됐다.

위험수당 안건은 노조 측이 차량사고, 비산먼지·감염 등 각종 위험요인에 상시 노출되는 노동자들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고 위험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자치구는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이강 구청장협의회장은 “신속하게 용역을 추진하고, 조만간 통합시에 자치구의 하나 된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5·18 폼페 논란’ 이진숙 제명촉구안 의결 국회운영위 범여권 17명 찬성…국힘 불참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우파단체와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국회 토론회를 열어 논란을 낳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가결 처리했다.

범여권 의원 17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해당 안건을 직권으로 상정하며 “여야 간사 협의를 거듭 요청했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의가 안 됐다고 아무 일

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유기”라며 “(5·18 민주화운동) 왜곡을 처벌하겠다고 법을 만든 그 국회에서 이진숙 의원이 버젓이 왜곡의 자리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로 판정된 주장에 학술과 재조명이라는 이름표만 바꿔 붙였을 뿐”이라며 “스스로 집단 괴롭힘이라 주장한다. 광주 학살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어디서 감히 괴롭힘이라 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이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자 회의에 불참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참 사유에 대해 “결의안에 동의할



수 없고, 더불어민주당도 윤리위에 올랐을 사람들이 엄청 많기 때문”이라며 “다수 여당의 폭거로 우리 당에 대해서(란) 이런 식으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윤리위에 올리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오후 2시 열리는 것으로 예정돼 있고, 비정점 법안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에 대해서는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구례·보성, 월 20만원 기본소득 지급

28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7개 군 첫 지급 규모 567억

구례·보성군 주민에게 오는 28일부터 1인당 월 20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 추가 선정된 전국 7개 군에서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전남 구례·보성을 비롯해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경북 청송이다.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주민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구례와 보성은 자체 군비를 추가로 투입해 지급액을 월 20만원으로 늘렸다. 청송도 월 20만원, 보은은 월 16만원을 지급한다.

구례·보성·화천·보은·청송은 오는 28일 첫 지급을 시작한다. 진안은 31일, 무주는 다음 달 10일부터 지급한다. 7개 군의 첫 지급 규모는 모두 567억원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7개 군의 사업 대상자는 18만5192명으로, 이 가운데 16만1851명이 신청해 87.4%의 신청률을 기록했다. 농식품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의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해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기본소득 소비가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 집중되지 않도록 군별 생활권과 상품권 사용처를 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본소득이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사업을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정부, 올해 공공비축미 40만t 매입

중간정산금 6만원으로 인상

정부가 올해 공공비축미 40만t(톤)을 매입하고 벼 재배 농가에 지급하는 중간정산금을 포대당 6만원으로 인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7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은 40만t으로 지난해 43만t에서 줄었다. 이 가운데 가루쌀은 3만5000t 수준이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확기인 10~12월 평균 산지 쌀값을 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한다. 정부는 매입 직후 농가에 40kg 포대당 6만원을 중간정산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중간정산금은 2017년부터 3만원으로

유지됐으나 2024년 4만원으로 인상된 데 이어 올해 다시 6만원으로 오른다. 농식품부는 최근 산지 쌀값과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친환경 벼 가운데 단백질 함량이 낮은 상위 30% 농가에 매입가격의 최대 5%를 가산하는 우대 지원도 시행도 입한다. 매입한 쌀은 경로당과 무료급식단체 등 취약계층에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은 각 시·군이 사전에 정한 2개 품종으로 제한된다. 지정 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하면 다음 연도 매입 때부터 5년간 공공비축미 출하가 제한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10월 말 정부관리양곡 총 쌀 재고가 71만t에 이를 것으로 보고, 공공비축미 매입과 판매, 대여곡 반납 등을 고려해 2027 양곡연도 말 재고를 84만t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1면 ‘호남반도체’서 계속

특별법 개정이 지연되면 출연사업 착수와 연도별 재정 투입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국회 입법이 남은 과제가 됐다.

정부와 기업, 통합특별시는 오는 10월 국가산단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11~12월 예타 면제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7년에는 산단계획 수립과 설계·인허가, 탄약고 등 일부 군사시설 정비에 착수한다.

광주 군공항 부지를 인도받는 2028년 광주 건설을 시작해 2029년 팜 2기를 우선 완공하고, 2030년 6월 첫 반도체를

양산한다는 일정이다.

전략·용수 기반시설과 재정지원이 동시에 국무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부지 확보와 기업 투자계획을 넘어 실제 건설을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반도체 국가산단의 선결 조건인 용수 인프라 관련 사업이 예타 조사라는 한 고비를 넘기면서 산단 조성 사업에도 파란불이 켜졌다는 평가다.

특별한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반도체 산단 조성사업 추진 의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봐야 한다. 용수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 정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